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가 이재웅 다음 창업자로부터 “오만하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11월에는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만난 후 확대 경제 관계장관회의에 다소 늦게 도착하며 “재벌들 혼내 주고 오느라고요.”라고 말했다가 또 한 번 사과했다.

## 경제협력

### ■ 개요

우리나라는 2017년 미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 측의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사드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중국과는 서비스·투자부문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FTA를 통한 ‘경제영토’ 넓히기에도 힘을 쏟았다.

### ■ 신기록 쏟아진 2017년 수출

2017년 연간 수출액은 5천739억 달러로 2016년 대비 15.8% 증가했다. 이는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실적이다. 수입은 4천781억 달러로 2016년 대비 17.7% 증가했다. 수출입을 합친 총 무역 규모는 1조520억 달러로 3년 만에 1조 달러를 회복했다. 무역수지는 958억 달러 흑자였다.

연간 수출은 11월 17일 역대 최단기간에 5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일평균 수출액은 2억3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인 3.6%를 기록했고, 세계 수출 순위도 2016년보다 2계단 오른 6위로 상승했다.

연간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13개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57.4%, 석유제품 31.7%, 석유화학 23.5%, 선박 23.6%, 철강 20.0%, 일반기계 10.2%, 컴퓨터 9.6%, 디스플레이 9.1%, 자동차 3.9%다.

반도체는 979억4천만 달러로 단일 품목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액 9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1994년 우리나라 총수출보다 많은 것이다. MCP(복합구조칩 집적회로) 47.5%, SSD(차세대 저장장치) 45.6%,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34.4%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도 크게 늘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은 9.9% 증가했다. 반대로 섬유 -0.4%, 자동차부품 -9.5%, 가전 -22.5%, 무선통신기기 -25.5% 등 4개 품목은 판매 부진과 해외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다.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아세안과 인도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한 지역은 베트남 46.3%, CIS 33.8%, 인도 30.0%, 아세안 27.8%, 유럽연합(EU) 16.0%, 중국 14.2%, 중남미 10.5%, 일본 10.1% 등 8개국이다.

미국 수출은 3.2% 증가했지만, 무역흑자는 완성차 판매 부

진에 따른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수출 감소와 천연가스·반도체 장비 수입 증가 등으로 2016년 대비 22.7% 감소한 179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2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세안·중남미·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 ‘남북 교역축’을 구성하는 신흥시장 수출 증가로 중국(25.1%→24.8%)과 미국(13.4%→12.0%)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등 시장 다변화가 진전됐다고 밝혔다.

### ■ 2017년 신규 수입규제 조사 27건…미국이 8건으로 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가 한국을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4건에서 2016년 44건으로 늘었지만, 2017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10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에서 열린 미국발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독 미국만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무려 8건의 수입규제를 새롭게 개시해 최대 수입 규제국(31건)이 됐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4건과 5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8건으로 꺾중 뛰었다. 이는 2위 터키(4건)나 3위 중국(3건)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치다.

미국 다음으로 수입규제 건수가 많은 나라는 ‘부동의 수입 규제 1위국’인 인도(30건)로 나타났다. 중국(15건), 터키(15건), 브라질(11건)도 수입 장벽을 높게 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전체 수입규제 건수는 총 191건이다.

2017년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6건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16년 만에 부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태양광셀·모듈 및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학과 철강·금속이 각각 12건과 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 ■ 전방위 통상압박 가하는 미국…한미FTA 개정 협상 개시

미국은 반덤핑 수입규제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우리나라 산업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2017년 '미치광이 전략'까지 거론하며 거칠게 우리 정부를 밀어붙인 끝에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 돌입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뿐만 아니라 AFA(불리한 이용가능 정보), PMS(특별시장상황) 등 각종 고강도 수입규제 수단을 동원하더니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 카드를 동원하면 미국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우리나라 산업에 초고강도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AFA는 조사 대상 기업이 미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조사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고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 정부는 또 다른 고율의 반덤핑 부과 수단인 PMS도 애용하고 있다.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주재료인 열연코일의 한국 내 구매가격이 PMS로 인해 왜곡됐다고 판단해 연례재심 덤핑 마진을 이전보다 높게 부과하기도 했다.

2018년 1월에 열리는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에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각 분야 개정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정부는 개정 협상에 대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사드 갈등 봉합한 한중...서비스·투자협정으로 새 협력 모색

자동차, 유통, 콘텐츠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치명타를 안겼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10월 말 공식적으로 봉합됐다. 이로써 한중 양국은 교역 관계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양국은 2018년 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사드 보복' 재발 방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됐다. 사드 보복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관광, 유통, 한류 콘텐츠 등이 서비스·투자 협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제조업 등 상품분야의 관세장벽 해소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당시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됐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중 간 기존 서비스 협상은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합의됐다."며 "관광 등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의 후속 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이 서비스·투자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서비스부문 협상에서 한국도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처럼 중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관 등

비관세장벽, 위생검역 강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은 어쩔 수 없어도 단체 관광 상품 판매 금지 같은 조치들은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고 천 연구원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서비스분야에서 205억 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고 164억 달러를 수입했다. 한중 FTA 후속 협상으로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최대 0.019% 증가, 대중 수출 최대 0.46% 증가, 대중 수입 0.31% 증가, 중국의 대한(對韓) 외국인 직접투자(FDI) 36.3% 증가 등이다.

### ■ 거세지는 보호무역... '경제영토 확장'으로 돌파

우리나라는 2017년 다자 FTA를 앞세워 '경제영토'를 넓히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미국과 중국에 휘둘리는 무역 구조를 개선하려면 신흥시장 공략을 탈출구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2004년 칠레를 신흥단으로 세계 각국과 FTA를 맺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7년 52개국(15건)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2015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굵직한 양자 FTA 체결을 마무리하는 등 최근까지도 꾸준히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2016년부터는 다자간 FTA 체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의 경우 각각 20차, 12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2017년 3월에는 한·중·미 FTA에 가서명했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5개 나라가 참여한 이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수는 57개국으로 늘어난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5개국이 참여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FTA 협상도 추진했다.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 신흥시장과의 FTA 추진도 빼놓지 않았다. 여기에 자원이 풍부한 거대 시장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7년 9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EAEU FT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EAEU는 2015년 1월 출범한 경제공동체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다자간 FTA 체결을 통해 치열해지는 수출시장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전에 발효된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도 추진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끔 한·아세안 FTA,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칠레 FTA 등에 대한 개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의 무역협정 협상을 앞두고 5월 9일(현지 시간) 상파울루 시에서 '한-메르코수르 산업협력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가 수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52개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2017년(1~11월 통계) 수출액은 3천803억5천100만 달러로 2016년 같은 기간보다 19.6%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16.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FTA 체결국 대상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셈이다.

실제로 FTA 발효 국가로의 수출액은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 5천247억9천700만 달러의 72.5%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FTA 발효 국가 수출액 3천504억2천5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 70.7%보다 높아진 수치다. FTA 발효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수출과 달리 FTA 발효 국가로부터 수입 증가율은 15.9%로 전체 수입 증가율 18.2%보다는 낮았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과 비교하면 수출은 더 많고 수입은 더 적은 것이다. 이로 인해 FTA 발효 국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1천59억4천500만 달러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다. 2016년 1~11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 899억8천800만 달러보다 많았다.

나라별로는 선박, 자동차 수출이 급증한 호주(178.1%), 덴마크(266.9%)의 수출 증가 폭이 컸다. 우리나라의 수출 3위 대상국인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2016년보다 48.4% 늘었다. 수출 금액은 FTA 발효 3년 차를 맞은 중국이 1천282억5천900만 달러(14.1%)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633억1천600만 달러(4.3%)로 2위를 차지했다.

FTA가 발효되면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양국 무역 확대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 ■ 외국인투자 229억 달러 '사상최대'...3년 연속 200억 달러

2017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목표치인 200억 달러를 넘겨 3년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229억4천만 달러로 2016년 대비 7.7%나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20.9% 증가한 128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FDI는 1~3분기가 2016년 대비 9.7% 감소한 135억9천만 달러에 그쳐 200억 달러 목표 달성이 불안했지만, 4분기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인 93억6천만 달러를 기록해 연간 목표를 달성했다. 산업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외국인 기업



▲ 10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영진 투자정책관이 2017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과 국내 대기업의 협력 수요 증대,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 확산, 부동산과 도소매 등 일부 서비스업 투자 증가, 정부 설명회 등 투자유치 노력이 최대 실적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2016년 대비 4.5% 감소한 70억6천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64.9% 증가한 63억5천만 달러다.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과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축소 등 부정적인 요인에도 2년 연속 70억 달러를 달성했다.

미국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2016년 대비 21.5% 증가한 47억1천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29.0% 감소한 9억5천만 달러다. 기술력 있는 한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제3국에 진출하거나 한국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하는 등 합작투자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2016년 대비 47.9% 증가한 18억4천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52.0% 증가한 12억3천만 달러다. 견조한 경제성장률과 인수합병(M&A) 확대 추세가 일본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이어졌고 한국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60.5% 감소한 8억1천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58.7% 감소한 2억 달러다. 중국 정부의 외환송금 규제 강화와 해외투자분야를 제한하는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등의 영향으로 연중 감소세를 보였지만, 12월 한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협력 분위기가 조성돼 향후 회복세가 기대됐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증가와 신소재, 바이오분야를 중심으로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6년 대비 41.2% 증가한 72억5천만 달러(이하 신고액 기준)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내수 회복세를 기대한 유통, 디지털 경제, 부동산 등의 투자가 증가했지만, 금융·보험 투자가 많이 감소하면서 2016년 대비 0.3% 감소한 154억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신규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선도기술 투자 증대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인 157억 달러(4.5% ↑)를 달성했다. M&A형 투자는 합작투자 증가로 2016년보다 15.4% 많은 72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FDI 추세와 유치 가능 사업 등을 고려하면 FDI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미국 금리 인상과 세계개편 영향의 본격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적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

### 농·축산업

#### ■ 개요

1975년 농가 인구는 1천324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37.5%나 됐지만 40년이 지난 2016년 현재 250만 명으로 5분의 1(18.9%) 수준으로 격감했다.